

### 2007 세법개정안 Q&A

Q: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포함 되는지?

## A:상환기간 15년 연장때 허용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되는데 세부담은 얼마나 경감하냐.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점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5분의 5(4.76%)에서 106분의 6(5.66%)으로 인상돼 2008년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식당주인이 3천만원어치 농산물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까지는 3천만원의 105분의 5인 143만원 가량을 세액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천만원의 106분의 6인 1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

### 음식업자, 농산물 3,000만원어치 구입때 27만원 더 공제

하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보전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며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입자가 기존대출의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계계산서 제도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발행하냐.  
 ▲물품 및 용역을 매입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세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지만 이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매입자발행 세계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가 해당된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냐.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의 업종을 이용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냐.

### ■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b>성장정책 지원 및 서비스업 지원</b>	대기업 비영리연구기관 위탁 연구·인력 개발에 대해 4년 평균 연구개발(R&D) 개발비 초과분의 50% 세액공제율(1월 1일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 10% 이상,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 5% 이상 세액공제율 적용한다.
<b>기업환경 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b>	절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입 판매비 부담으로 과세되는 판매장려금(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을 중소기업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허용(시행일 이후 수입배당금 수령분부터)을 적용한다.
<b>근로자 지원</b>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 추가(시행일 이후 기존 차입금 연장을 상환하는 분부터)·기타정원 유지시주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소득세 비과세(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을 적용한다.
<b>노인·장애인 지원</b>	연료·기초생활보장 급여 비과세(올해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장애인 시용 후 유족에 대한 특수세 추정제도 폐지(시행일 이후 상환분부터)를 적용한다.
<b>농어업 지원</b>	농지 대도시 임대소득 감면(농지 취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1월 1일 이후 수확물 대채취득하는 분부터)를 적용한다.
<b>자영업자 지원</b>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5분의 5에서 106분의 6으로 인상, 일몰 2년 연장(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표분부터)을 적용한다.

▲7월부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세무당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 성실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냐.  
 ▲우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을 도입해야 한다.  
 -약국의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 약품비가 빠지는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약품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해서 원천징수를 했다가 추후 약품비 원천징수 부분이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다.  
 -부담행위계산부인인 무엇인가.  
 ▲법인 등의 행위나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제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 '분양가 상한제' 완화 검토

### 건교부 추진

일반아파트에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규정'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반아파트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대책에서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이어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재건축·재개발아파트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3개월이던 충분하지만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건교부 관계자는 "12월1일 이후에는 고분양가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 여수·광양·남해 3개시군 562만평 규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여수, 광양, 경남 남해 등 3개 시·군 562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확대 대상 지역은 여수 묘도 복합단지(266만평), 여수-고흥 11개 연륙교 가설 지역 주변단지(54만평), 광양 울촌 제3산단(157만평), 포스코 복합물류부지(5만평), 남해 관음포 산업단지(41만평), 서면 관광 위락단지(39만평)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확대 지정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이달 중 개발계획변경 용역에 들어가 재경경제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대·지정을 가시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2천733만평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3천295만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부지가 기존 부지와 인접해 있어 확대·지정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2012세계박람회 유치에 간접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 중인 부산-진해자유무역협정과 공조 체제를 유지, 이들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광양=김춘중기자 chkim@kwangju.co.kr

### 제수용품 불법 반입 검역 강화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 호남지소 광주출장소(소장 임정표)가 설을 맞아 농산물 불법반입, 허위신고 등 식물방역법 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17일부터 2월25일까지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검역대상품목은 제수용품(밤·곶감·견과대추·호두 등 과일류와 고사리·도라지·더덕·우렁·담근 등 채소류), 여행객 휴대반입 식물류(제수용품·제수용품·인삼류·금지과일)이다. 이 기간동안 출장소는 ▲공항으로 수입되는 식물의 현장감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강화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단속강화 ▲X-ray 검역강화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다.

임정표 출장소장은 "설 연휴 기간동안 '식물검역 특별지원반'을 구성, 우리 농산물의 신속수출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며 "오렌지·사과·호두 등 과일이나 휴이 부착된 수입금지 식물류의 반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기아차 노사 '성과금 갈등'

### 목표 미달로 50% 안줘...노조선 "약속 지켜라" 주장

현대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성과금 문제로 인한 노사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광명의 기아차 노동조합은 16일 서울 본사를 향의 방문한 데 이어 17일 노조 위원장이 대표이사에게 성과금 지급을 포함한 노사합의의 준수문제에 관한 노사간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노사가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는 16일 발행한 노조 소식지 '합성소식'을 통해 "2006년도 생산목표를

달성했다"며 "150%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한 노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노조는 과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측이 끝까지 생산목표 미달이나 경영악화 전망이라는 억지주장으로 노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노사관계 파행으로 인한 최악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호 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생산량을 감축 조정했기 때문이므로 그 귀책사유를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의 요구에 대한 회사측의 반응을 본 뒤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관마로 정의행위에 돌입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 같은 문제로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노조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기아차는 지난해말 생산자금을 이유로 2006년분 성과금 150% 가운데 100%만을 지급하기로 하자 노조측이 반발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노사는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4차례 걸쳐 공문을 주고받으며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생산목표 미달의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북 여성근로자가 만든 로만산 시계

17일 개성공단에 위치한 로만산 시계 공장에서 북한 여성 근로자가 만들어진 시계를 검사하고 있다. 국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 기업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등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촉망 지원했다.

/연합뉴스

## 지상파 DMB 전국에서 본다

### 지역 민방사업자 내달 허가·상반기 시청 가능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제한적으로 시청할 수 있었던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상반기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지역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로 선정된 1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국 허가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전 약 60일 걸리던 방송국 허가 심사기간을 30일로 대폭 단축해 다음달에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국 허가 처리는 통신 기초심사(서류심사), 기술심사(방송설비) 및 기술기준 적합성 심사로 이뤄지며 정보통신부는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허가 준비반을 구성했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방송의 안정적 제공과 독립적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가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송신소 및 연구소(주

### 삼성 이재용씨 전무로 승진

## 경영권 승계 한걸음 더...

### 472명 임원 승진인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전무로 승진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또 삼성전자 IR팀장인 주우식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격되는 등 그룹 전체로 사상 최대 규모인 472명이 승진했다.

이와 함께 운송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이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 홍보파트장으로 임명되는 등 전 분야로 함께 단행됐다.

삼성그룹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승진자는 부사장 30명을 비롯해 472명으로 2005년 455명, 2006년 452명을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다.

직급별 승진자는 △부사장 30명 △전무 54명 △상무 182명 △상부무 206명 등이다.

이재용 상무의 경우 부사장이나 그이상의 직급으로 과격적인 승진을 통해 경영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지배적인 전망대로 한 직급 올라가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 증권가 루머 70% "근거 있다"

### 사실 확인은 27% 뿐... 신뢰도 하락 추세

증권가 소문의 10개 중 7개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집계한 '2006년 조회공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인수합병(M&A), 감사의견, 자금, 대주주 불법 등에 대한 소문 230건을 해당업체에 조회한 결과 26.96%는 사실로 확인됐으며 43.91%는 미확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무근인 소문은 29.13%였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증권가 소문

에 대한 해당업체의 반응은 사실무근 22.14%, 미확정 45.80%, 사실확인 32.06% 등인 것으로 조사돼 작년들어 증권가 소문의 신뢰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작년 중요한 정보를 공시전에 외부로 유출해 주식거래에 이용한 일부 사례를 적발, 형사처벌했으며 향후에도 풍문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 거래소는 또 작년 주가가 급등락한 304건에 대해 조회한 결과 67.43%가 주가급변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급등주 따라잡기식 투기적 매매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가급변 사유가 없는 종목들은 조회공시 전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이 평균 40%대의 상승률을 나타내다 조회공시 후 약보합세로 반전됐다.  
 주가급락 사유가 없는 종목들은 조회공시 전 유가증권시장 23.6%, 코스닥시장 39.2%의 하락률을 나타내다 조회공시 후 3일이 지나면서 유가증권시장은 6% 상승세로 반전했고 코스닥시장은 하락률이 3.9%로 축소되며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연합뉴스